

여야 '교과서 개편 검토' 공방

여권이 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비롯, 교과 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지자 야권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려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여당에 의해 국민 평가가 자행하는 것은 위협스러운 것"이라며 "무능한 정권의 시각을 강요해 친재벌, 친독재권력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고, 병진적 사교를 우리에게 주입하겠다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친일·친독재 찬양·친재벌 발상, 중단해야"

한나라 "좌편향 기술·경제성장 폄훼 바로 잡아야"

'햇볕정책'의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지원 의원이 "햇볕정책은 당시 정부가 이들을 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이를 붙인 것으로, 통일부가 정작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오버하고 있다"며 "정 권교체가 될 때마다 정책 이름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야 하는지 국회에서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학문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이자,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술이 돼야 할 역사 교과서를 한나라당식 우편향으

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교과서 전면 개편 요구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조만간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역사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역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는데 경제 성장과정에서 문제점만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폄하하거나 축소했

다"며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면을 부각하고 역사에 대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당의 생각과 의견은 금방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교과 위원회' 구성을 통한 교과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자 "교과서에 대해 원로그룹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교과서의 전면 개편 요구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간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 정상화 시킬 부분은 있다"며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념 편향되고, 경제성장 등의 부분이 폄해됐던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도부 총출동 '호남 챙기기'

정가 브리핑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최고 위원회의와 시·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집토끼 챙기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오후 4시 광주시청에서 '민주당-광주시·전남도 정책협의회'를 갖는데 이어 26일 광주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원로, 언론인, 대학 총장단과의 만남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진행중인 '최고위원회의 및 지역 정책협의회 개최'일정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주선·송영길·김민석·안희정·김진표·장상·윤덕홍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 출동,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복안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우윤근(광양시) 제 1정조위원장이 주관하는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노영민(청주시 흥덕구 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부위원장과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이 주제 발제에 나서고 민주당 백재현(경기도 광명시 갑) 의원,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심익섭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회자로 참여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리운전법 제정안 발의

○민주당 송영길(인천시 계양구 을)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 경력자의 대리운전을 제한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운전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마약·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자분급, 대리운전자인원,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박재순 '농업 확대 안타까워'



○한나라당 박재순(64 사진) 최고위원은 21일 한나라당의 농업지원 정책과 관련, "매주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지만 한 분도 농업을 걱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쓴소리를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안보식량 확보차원에서 농업 확대는 안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쌀 공공비축량 확대 ▲면세유 가격 인하 및 공급확대 ▲화학비료 가격 지원 ▲배합사료에 지원자금 투입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송하성 경기대 교수 '내 아이도 꿈을...' 출판기념회

송하성(54) 경기대 교수는 지난 20일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청소년동맹연합 이사장 취임식을 겸한 '내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송 교수의 책은 고흥에서 태어나 행시(22회)에 합격, 24년간 공직에 몸 담으며 꿈을 이뤄가는 과정과 자신을 포함한 6남매 중 4남매가 사시·행시 등에 합격하게 된 비결, 영어 공교육 개혁 방안, 청소년들을 위한 조언 등을 담고 있다.

송 교수는 광주상고, 성균관대(경제학과), 프랑스 소르본느대(경제학 박사)를 거쳐 경



제기획원 과장, 청와대 경제비서실 과장, 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 공청위 심판관리관 등을 지냈다.

이날 기념회에는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 임현모 전 광주교육대 총장 등 2천여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홍준표와 원혜영...무슨 얘기 나눌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햇볕 정책' 삭제 의견 배경은

'화해 협력' 공식 명칭 복원 차원 "병행 사용 가능"

통일부가 지난 6월 현행 고교 교과서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에서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한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라는 대목을 "김대중 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냈다.

통일부는 그 이유로 햇볕정책은 국민의 정부 당시 대북정책인 화해협력정책의 별칭인 만큼 정식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국민의 정부 당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협력정책을 공식화했다"며 "다만 외국인과 해외언론 등에서 '햇볕 정책'이란 뜻의 'Sunshine Policy'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애칭으로 혼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즉 DJ정부 대북정책에 애칭 대신 공식 용어를 찾아 주려는 취지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DJ 정부시절 도입된 참여정부에서 그 기초가 계승된 '햇볕정책'이란 표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 익숙해져 있음을 감안할 때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굳이 빼려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기왕 교과서 기술의 정확성을 감안, 공식 용어로 대체할 경우 국민들의 기존 인식을 감안, '햇볕정책'으로 불린 화해협력정책' 등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햇볕정책과 관련, "웃을 벗어야 하는데 웃을 벗기려는 사람이 웃을 벗었다"고 뼈있는 농담을 한 점을 상기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비판적 시각이 용어 수정 의견에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논란이 일자 두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호년 대변인은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돼 널리 알려져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이 햇볕 정책이라고 불러 왔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문맥에 따라서는 화해협력정책과 햇볕정책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野 "유모차 수사는 엄마 탄압"

야권은 20일 유모차를 끌고 훔쳐잡힌 자를 처벌했던 주부들이 활동했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와 회원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엄마 탄압'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훔쳐잡힌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은 고통스런 입덧 기간을 꼭 참고 열 달을 품어 낳은 자식을 걱정해 나온 분들"이라며 "죄없는 엄마까지 잡아들여 공안정국의 불모로 삼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탄압, 종교탄압에 이어 엄마탄압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당장 이 수 치스러운 행태를 거둬들이고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경찰은 화풀이성 보복수사로 훔쳐잡힌 자를 100만이 넘는 시민들을 다 가둬야 수사를 마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후퇴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光산업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 국제光산업전시회

2008년 9월 23일(화) ~ 25일(목) 광주광역시 남구 광안동(광안3리) 1번지

- 광안동 1번지 (남구)에 위치한 광안3리 1번지 일대
- 2008년 9월 23일(화) ~ 25일(목) 3일간 개최
- 광안동 1번지 (남구)에 위치한 광안3리 1번지 일대
- 2008년 9월 23일(화) ~ 25일(목) 3일간 개최
- 2008년 9월 23일(화) ~ 25일(목) 3일간 개최
- 2008년 9월 23일(화) ~ 25일(목) 3일간 개최

광주광역시 남구 광안동 1번지 1호 (광안3리) 1번지 일대

문의: 061-265-3440 (주최) 061-600-1636 (주최)

www.g2008lightexpo.com